

주제회의
청년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청년의 현황

‘청년의 이름을 팔아 청년을 죽이는
기만적인 정책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

장혜영
[대한민국 국회의원]

들어가며

우리 사회는 청년에게 희망의 사회인가 낙망의 사회인가

“낙망(落望)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습니다.”

이 비장하고 다소 예스러운 문장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인 1927년 1월 잡지 <동광>에 기고한 글에서 발췌한 것이다. 그리 길지 않은 이 글의 주제는 지속되는 일제 식민 지배 아래 절망하고 방황하는 당대 청년들에 대한 염려와 격려다. “오늘 대한의 환경은 사회, 도덕 방면으로든 경제 방면으로든 모두 심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 이것을 헤치고 나아가려면 차마 견디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100년 전 독립운동가의 메시지이지만 여전히 시대를 넘어 우리 사회와 청년들을 향한 묵직한 울림이 느껴진다.

생로병사는 모든 인간의 숙명이다. 한 사회는 세대를 거듭하며 이어진다. 한 시대의 청년은 그다음 시대의 중년이고 장년이며 노년이다. 한 시대의 청년이 아무리 커다란 희망을 가졌다 해도 그다음 시대의 청년이 희망을 잃는 순간 그 사회는 희망을 잃는다. 반대로 아무리 고통스러운 역사적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해도 당대의 청년들이 희망을 간직하는 한 그 사회에는 새로운 미래를 향한 희망이 자랄 수 있다. 그렇다면 2023년 현재 대한민국 청년과 사회는 어떨까? 청년들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숨 쉬고 있을까? 아니면 절망과 방황, 불안이 희망이 있어야 할 자리를 무겁게 잠식하고 있을까? 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여러 조사와 연구들은 지금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을 채우고 있는 것은 미래를 향한 희망보다는 짙은 현실의 벽 앞에 느끼는 좌절과 불안, 절망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절망은 청년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으로부터 파생된다. 고도로 자본화된 사회에서 청년들이 겪는 구조적 불평등에 대해 일찌감치 많은 담론과 정책들이 제기되고 그 가운데 몇몇은 ‘청년기본법’ 등의 형태로 결실을 맺기도 했다. 그러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최근 추진되어 온 우리나라의 다수 ‘청년 정책’은 이름만 청년을 내세울 뿐 오히려 청년들이 겪는 구조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세계인권도시포럼 청년 섹션을 맞이해 ‘청년의 이름으로 청년을 죽이는’ 정치권의 기만적이고 모순적인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넘어서기 위한 새로운 연대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론: 청년을 배반하는 청년 정책

(1) 코로나19 이후 심화되는 고용불안과 자산 불평등 앞에 빚내서 ‘막차’ 타는 청년들

지난 2020년 초,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사회 각계각층에 다양하고 근본적인 영향을 미쳤다. 고용 영역에서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은 계층은 다름 아닌 청년이었다.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청년층 불평등 현황과 과제: 노동시장, 소득 및 자산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4월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통계 작성 이래 최대인 24만 5천 명 규모로 감소했다. 청년 고용은 감염세가 잦아든 2021년 2분기부터 최근까지 양적으로만 보면 빠르게 회복되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대부분 취약한 기간제 일자리라는 점에서 오히려 구조적 불안정성이 심화되었다. 고용이 불안정해지니 소득이 덩달아 불안정해졌고, 이는 청년 부채가 급증하는 문제로 이어졌다. 사회초년생인 20대의 빚 문제가 급격히 악화한 것이다.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한 청년 금융부채의 비중은 심각했다. 먼저 제1금융권, 시중은행에서 20대가 빌린 신용대출잔액은 2020년 1월에 5조 2253억 원이었던 것이 11월에는 7조 3258억 원으로 증가했다. 10개월 동안 무려 4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같은 기간 모든 연령대의 신용대출 잔액 증가율은 20%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대의 부채 증가세는 매우 심각했다. 제2금융권으로 가면 상태는 더 심각했다. 2020년 상반기 저축은행 마이너스통장 신규 고객의 47.2%, 거의 절반이 29세 이하 청년이었다. 저축은행 대출 잔액도 유독 29세 이하에서만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 30대 이상은 오히려 전년에 비해 대출 잔액이 감소하는 추세였다.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도 문제였다. 저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지원을 위해 많은 나라들이 금융지원과 재정지원을 공격적으로 펼쳤고 엄청난 유동성이 시장이 공급되고 있었다. 이러한 유동성은 대표적으로 부동산 등의 자산 시장으로 몰려들었고 이는 집값폭등을 초래했다. 지난 2020년 6월, 의원실이 금감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은 288조 원이었고, 그 가운데 30대의 취급액이 102.7조 원에 달해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전세자금대출 신규취급액 역시 30대가 가장 많았다. 해당 기간 30대의 전세자금대출 신규취급액은 30.6조 원에 달해 전체 신규 취급액의 43%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20대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잔액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 청년 부채 폭등 앞에서 주거 안정 대신 보유세 감면으로 집값 부채질한 정부 여당과 제1야당

이 시기, 정부와 국회가 응당 했어야 할 일은 자산과세를 정비하여 폭등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청년들의 부채가 악화하지 않도록 시의적절한 대출규제를 정비하며 사회 초년생으로서 신용이 부족한 청년들이 생계형 금융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그러나 당시 정부 여당의 정책은 정반대 방향을 향했다. 정부는 2021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뒤 ‘공평과세’ 원칙을 폐기하고 증부세와 재산세 등 자산과세를 줄줄이 완화했다. 그 결과 2021년 12월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 서울 아파트 시세 변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 30평 기준 2017년 5월에 6억 2천만 원이던 아파트 가격은 2021년 11월 기준 약 12억 9천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상승했다. ‘정부 출범 4년만에 서울 아파트 값 두 배’라는 비판이 나왔던 배경이다. 바로 이 시기에 청년들의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대출)’ 같은 신종 줄임말이 본격적으로 뉴스를 장식하기 시작했다. 2021년 9월 말 의원실이 금감원에 확인한 자료를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30 청년세대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은 무려 257조 원으로 전 연령대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의 44.5%에 달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이 고스란히 청년의 가계부채로 이어진 것이다.

한편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주택 구매 행렬에 동참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청년들은 주식이나 가상자산 등에 눈을 돌렸다. 의원실이 지난 2021년 10월 금감원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상반기에 만 청년 세대(10~30대)가 주식투자를 위해 증권사에서 대출받은 금액은 38조 원을 넘었고, 이는 2020년도 전체 신규대출액의 68%에 달하는 금액이다. 2021년도에 새로 개설된 증권계좌 2115만 개 중 절반이 넘는 1172만 개가 청년들이 개설한 것이었다.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빗썸에 따르면 2030 세대의 가상자산 투자 비중은 2021년에는 49%였고 2021년 기준 연령대별 코인 투자 비중은 30대가 가장 많다. 이러한 청년 가계부채 폭등의 이면에는 청년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증가세가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2030 청년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인의 정직한 노력을 통해 더 나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상승할 수 있다는 믿음이 약해지고 사회 안전망이 취약해짐에 따라 우리 사회가 오로지 개인이 축적한 자산만이 생애주기를 따라 찾아오는 복지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는 ‘자산 기반 복지’ 사회로 진입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낀 많은 청년들은 ‘더 늦기 전에’ ‘막차라도 타기 위해’ 앞다투어 빚을 내어 자산투자 혹은 투기에 나섰다. 정부 당국과 국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특히 선거를 앞두고 청년을 진지한 정책의 대상이라기보다 일종의 ‘표심’으로만 간주하며 이러한 ‘영끌’과 ‘빚투’를 이해하는 척 방치하고 부채질했다.

(3) 구조적 불평등은 그대로 둔 채 ‘빚내서 투자하라’고 청년 부추기는 청년정책(?)의 책임은 청년의 몫: “누가 코인 사라고 칼 들고 협박했나?”

사회초년생으로서 막 사회에 발을 디딘 2030 청년들이 무리하게 빚을 내어 자산 투자에 뛰어드는 경향은 청년 개인 당사자의 가계 경제 차원에서나 우리나라 거시경제의 활력을 저해한다는 차원에서나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식적인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선거를 앞둔 정치권 안에서 거의 금기시되었다.

이러한 경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다. 코인 광풍이 한창이던 지난 2021년 4월 22일에 열린 국회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작심 발언과 이에 대한 여야를 가리지 않는 정치권의 반응이다.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 투자를 보호해야 하지 않느냐고 묻는 상임위원의 질의에 가상자산투자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답변을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내놓았다. 국회 회의록에 남은 은성수 위원장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저는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국민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관심 갖고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잘못된 길로 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루에 20%씩 올라가는 자산을 그것을 가지고 보호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쪽으로 더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은 어른들이 이야기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략) 이것은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던 것이고, 이것은 가상자산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고 그다음에 가격이 너무 급변동하니까 위험하다는 것을 정부는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청년을 중심으로 한 가상자산 투자가 지나친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시점에서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 금융위원장의 염려는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었다. 그러나 청년 표심에 촉각을 곤두세우던 당시의 여당 의원들은 금융위원장의 상식적인 지적에 즉각 ‘청년’을 앞세운 날선 비판을 내놓았다. 이광재 의원은 “청년의 요구는 분명하다. 암호 화폐 시장을 산업으로 인정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최연소 청년 의원인 전용기 의원은 “금융위는 정신 좀 차리라. 기성세대의 잣대로 청년들의 의사 결정을 비하하는 명백한 꾀대식 발언” “모든 걸 포기해야 하는 n포 세대에 유일한 희망이 금융시장인데, 이런 입장을 이해하기보다 질책의 목소리가 먼저 나오면 청년들은 대체 무엇을 믿고 무엇을 기대하느냐”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노웅래 의원은 “가상화폐를 투기 수단으로만 폄훼하고 규제하는 건 금융권의 기득권 지키기이자 21세기판 쇠국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이후 안타깝게도 은성수 위원장의 경질을 요구하는 국민 동의 청원이 빗발쳤고 20만 명이 넘는 이들이 참여했다. 그해 8월 말 은성수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이임식에서 은성수 위원장은 해당 발언이 실언이 아니라 “마음먹고 한 경고”였으며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된 데 대해 누군가 언젠가는 얘기해야 하는 것이었고 마침 정무위에서 질문이 나왔기에 대답했다”라고 소회를 남겼다. 그해 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선후보는 청년 정책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시행하기로 예정했던 가상자산과세를 유예하겠다는 공약을 ‘소확행’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해가 바뀌어 2022년이 되자 가상화폐 시장에는 여러 악재들이 겹치며 찬바람이 불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연준은 금리를 급격히 인상했고 투자심리는 얼어붙었다. 5월에는 얹친 데 덮친 격으로 테라폼랩스의 테라 루나 폭락 사태가 발생했다. 자산 형성의 ‘막차마저 놓칠지 모른다’는 불안 심리에 과도한 빚을 져 가며 무리하게 주식과 가상자산에 투자했던 청년들은 막대한 손실과 이자 부담을 지게 되었다. 심지어 그 가운데 투자 실패를 비판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마저 연이어 발생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무리한 가상자산 투기가 ‘청년의 요구’이자 ‘청년의 의사결정’이라고 옹호하며 금융위원장을 질타했던 그 누구도 이러한 현상에 대해 책임지지 않았다. 그 와중에 그해 말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사이좋게 2023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와 코인 과세를 2025년까지 유예했다.

한편 2022년 7월, 새롭게 들어선 윤석열 정부의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로 인한 민생고가 심화되자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며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저신용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해 1년간 한시 운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이 정책을 발표하는 브리핑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다. “자산 가격 조정에 따라 저금리 환경에서 돈을 빌려 주식, 가상자산 등에 투자한 청년들이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수많은 시민들이 이 발언을 보고 청년의 코인 투기 실패를 국민 혈세로 보호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며 공분했다. 이러한 공분이 너무 높아 가상자산투자를 하는 청년 일반에 대한 혐오로까지 번질 지경이었다. 깜짝 놀란 정부 여당은 정부의 정책이 코인 투기의 원금을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황급히 내놓았다.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이 모든 논란은 정부가 ‘가상자산’으로 ‘청년’의 환심을 사기 위해 현실과 동떨어진 불필요한 발언을 내놓아 오히려 정말로 생계가 어려워 채무조정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타격을 준 해프닝으로 드러났다. 신복위 채무조정 특례를 지원받고 있는 청년들의 연체 발생 사유의 절반 이상 (51.3%)은 생계비 증가와 실직이었다. 뒤를 이은 것이 금융 비용 증가 및 근로 소득 감소(25.6%)였으며 사람들이 지탄하는 주식 등 투자실패의 사유는 전체의 0.8%에 불과했다.

(4) 청년의 이름으로 청년을 배반하는 기득권의 청년팔이 정책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공수는 바뀌었지만 정부여당의 유력 정치인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청년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기는커녕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청년들의 불안에 올라타 근본적인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청년의 삶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청년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올해 7월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2023년도 세법개정안에 담긴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다. 지금도 자녀 1인 결혼 시 재산을 증여할 때 부모들은 5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는다. 부부가 받는 공제를 합친다면 1억 원까지 공제를 받는 셈이다. 개정안은 여기에 1억 원을 더해 1억 5천만 원까지 과세 없이 증여하게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 내용을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정책이라고 포장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혼인공제신설은 청년정책 혹은 결혼정책을 빙자한 뻔뻔스러운 부의 대물림 특혜 정책이다. 애초에 비과세인 평균적인 결혼 비용과 이미 존재하는 증여 공제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증여세를 내는 이들은 1억 원 이상을 증여하는 이들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수증인이 30대인 경우 1억 원 이상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는 2만 7668건이다. 2022년 결혼한 30대 가운데 이들 비중을 따져보면 14.3%에 해당한다. 즉 작년에 결혼한 30대가 증여세를 냈다면 최소 상위 14.3%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혼인공제는 바로 이들을 위한 것이다.

또 다른 기만은 청년을 앞세워 부동산 대출 규제를 풀어 집값을 부양하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이다. 지난 2022년부터 바짝 오른 물가를 잡기 위해 고금리 정책이 시행되었고 2008년 이후 단 한 번도 줄어든 적 없던 가계부채가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청년 부부 등의 실수요자에게 대출을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대다수 청년과 아무 관계없는 각종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여 겨우 감소세로 돌아섰던 가계부채를 다시 가파른 증가세로 되돌려놓았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청년을 팔아 청년을 죽이는 기만적인 청년정책은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반복을 멈춰야 한다.

나가며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발제문의 첫머리에서 인용한 ‘낙망은 청년의 죽음이고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는 비장한 문장을 다시 떠올린다. 21대 국회의 몇 안 되는 30대 국회의원으로서 한국 사회 권력의 지형에서 너무나 과소대표되고 있는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겪는 세대 간, 세대 내 불평등의 지형에 맞는 다종다양한 맞춤형 지원 정책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너무나 오랫동안 이어져 온 ‘청년 없는 청년 정책’ 혹은 ‘청년의 이름으로 청년을 더욱 심화된 불평등의 구조로 밀어 넣는 기만적인 정책들과 단호히 결별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대물림받을 부를 갖지 못한 청년들이 내몰린 구조적으로 취약한 고용 시장과 그로 인한 소득 불안정, 이로 인한 자산 격차와 그 불안으로 형성된 과도한 부채를 해결하지 않고서 마지막 사다리에 올라탈 ‘운 좋은 청년’이 되기 위해 골몰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될 수 없다. 우리의 희망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다.